

# 정의화 “직권상정 하면 내姓을 바꾼다”



시선 집중 정의화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국회 본청 1층 로비에서 기자들로부터 선거구 확정안과 쟁점법안 직권상정 여부 등 정국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변하고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청와대 경제·노동법안 처리 압박에 버티기 다음달 8일까지 처리 안되면 공은 20대 국회로

박근혜 대통령이 출가처가 처리를 압박 해온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관련 법안, 테러방지법 등이 연말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핵심 쟁점에 대한 양측의 의견 차이가 워낙 크다. 처리 방식에서도 여당은 일괄 타결에 무게를 둔 반면, 야당은 각 상임위에서 처리 시한을 못박지 말고 충분히 심의하자고 요구하고 있어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17일까지도 정의화 국회의장을 상대로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있지만, 정 의장은 ‘불가’ 의사를 확고히 했다. 정 의장은 이날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가 성을 바꾸지 않는 한 직권상정은 없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의 태도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이 돼 있는 대한민국 민주체계에 의심이 가는,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말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고 비판했다. 청와대와 여권으로서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 법안의 처리를 위한 방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다만, 전날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경제 활성화법과 관련, 야당이 심의도 하지 않고 반대하는 것처럼 국민에게 비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야당이 다소 유연한 태도로 돌아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으나 이 발언으로 야당이 법안에 대해 이전과 다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특히 야당의 경우 민노총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노동단체가 의사 결정 과정

에서 적지않은 영향력을 미치는 현재의 구조로 볼 때 야당 지도부가 이들 쟁점 법안처리에 합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참여연대와 민노총 등은 여권에서 추진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원내 사령탑’인 이종걸 원내대표도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對)국회 압박 이후 더욱 강경해진 입장을 보여 돌파구를 찾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 “초헌법적 태도”,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의회주의를 문란케 하는 행위”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다. 이날도 새누리당 원우철 원내대표와 이 원내대표는 비공개로 회동해 법안 처리 문제를 협의했지만, 예상대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들 주요 쟁점 법안이 1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다음달 8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사실상 19대 국회에서는 입법이 무산될 공산이 크다.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등 이미 4·13 총선 정국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1월과 2월에 임시국회를 소집한다 해도 제대로 운영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2월 임시국회에서까지 쟁점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자연스럽게 내년 20대 총선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부상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으로서 국회선진화법 체제하에서 20대 국회에서라도 노동개혁 법안과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하려면 총선에서 18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야당은 ‘여권의 일방 처리’를 막으려던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며 야당에 최소한 과반 의석을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선거구 확정 직권상정때 처리 절차 방향은 본회의 수정권한 없어 可否만 의결 ‘지역구 253+비례 47석’ 통과 가능성

선거구 확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힘에 따라 향후 관련법 개정 절차가 주목된다. 정 의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야가 선거구 확정과 관련해 연내에 합의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심사기일을 오는 31일 전후로 정해 직권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거구확정안 즉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법’은 공직선거법에 ‘별표1’로 첨부된다. 이에 따라 선거구 확정안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일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5일로 활동 시한이 만료돼 해산된 만큼 여야가 다시 정개특위를 구성하지 않으면 법안 심의 절차는 선거 업무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가 하게 된다. 구체적 절차는 먼저 정 의장이 선거구 확정위원회(이하 확정위)에 일종의 ‘국회의장 중재안’ 성격으로 선거구확정 가이드라인(기준)을 제시하고, 확정위가 이를 토대로 ‘선거구 확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다. 확정안이 제출되면 정 의장은 이를 안행위로 보내 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행히 안행위에서 대안을 의결하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면 되나 만약 안행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 의장은 심사기일을 지정해 직권상정 절차를 밟아 곧바로 안건을 본회의로 올리게 된다. 선거구확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본회의에서는 수정권한 없이 채택 여부에 대한 ‘가(可)’, ‘부(否)’만 의결하게 된다. 이와 관련, 정 의장은 오는 18일 마지막으로 여야 지도부를 불러 중재를 시도한 뒤 협의를 이루지 못하면 곧바로 중재안 마련에 착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관계자는 17일 “애초 국회 소관 상임위는 선거구확정안에 대해 1회에 한해 재확정을 요구할 수 있어 현재의 지역구 의석수인 246개 안이 올라올 경우 여야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두번째 대안으로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안’이 올라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새누리도 계파 갈등 심각 공천률 만들 특별기구 구성 놓고 옥신각신

새누리당이 계파 갈등으로 내년 총선 공천률을 만들 공천특별기구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천특별기구 구성 계획을 발표하고 두 달여 만인 지난 7일 간신히 황진하 사무총장을 위원장에 임명하며 첫 발을 뗐지만, 이번에는 나머지 위원 인선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황 사무총장은 17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구 구성에 대해 “위원 수는 10명 내외가 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명단이나 인선 기준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하다”며 “월요일(21일)에는 (인선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구성이 지연되는 데는 인선 ‘기준’을 놓고 친박(친 박근혜)계와 비박(비 박근혜)계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무성 대표는 애초 당원적인 사무총장단을 중심으로 전·현직 전라기획본부장, 당 국민공천제TF(태스크포스) 위원 등 관련 당직 경험을 기준으로 하는 인선안을 제시했으나, 친박계에서 이를 두고 김 대표의 ‘자기 사람 심기’라며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친박계는 그러면서 계파색이 짙은 ‘인물 위주’의 인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 과정에서 김도읍·김희선 의원 등의 일부 출사 출신 의원들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위원회의는 이날 한 시간의 격론 끝에 결국 최고위원들이 각각 1~2명씩 추천한 명단을 토대로 위원장인 황 사무총장이 명단을 정리해오는 방식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이종걸 “文 사퇴 없인 복귀 없다”

김한길 “야권분열 문대표 책임”...새정치 갈등 고조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17일 최고위 복귀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야권 재편의 핵심 변수인 김한길 전 공동대표도 문재인 대표의 ‘파이웨이’ 선언을 정면 비판하는 등 당내 갈등 수위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승리의 길이 있다면 전력을 다해 그 길을 추진해야 한다”며 “그런 문 대표의 2

열의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고 거기에 가담 하라는 뜻으로 들린다”며 “그런 취지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최고위 복귀 조건으로 “우선 안철수 전 대표, 천정배, 박추선, 박준영 모든 분의 통합이 이뤄진다면 국민의 통합요구에 비춰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천정배 의원을 만날 계획이 있는 그는 “저에게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오라는 취지는 그런 당 대표 중심의 반통합·분

김한길 전 공동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표가 더 엄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야권의 분열상에 대해 모든 책임을 남들에게만 묻는다면 세상에 참으로 민망한 일이 되지 않겠느냐”며 문 대표를 정면 비판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바람이 차다. 세월이 좋다”며 “문 대표의 표정과 말씀이 무섭다. 이 단호함과 엄격함은, 먼저 거울을 보면서부터 적용돼야 마땅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문 대표는 전날 “혁신을 무력화하고 당내 투쟁을 아가해 결과적으로 정권교체를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 이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 “MG여성만세예금”이란?

알뜰한 당신에게 “MG여성만세예금”을 추천합니다. 만 18세 이상인 여성들에게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 통장! (단, 수수료 면제 조건이 충족 되어야 면제 됩니다.)

### “MG new 정기적금”

예금을 크게 키우는 똑똑한 금융 습관! 가입조건에 따라, 우대이율이 제공되는 정액적립식 예금! ▶ 1년 최대 2.6% 이율 적용

### 담보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감사가 대비 70% 가능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최대 2,000만원 가능  
**임대보증금 대출**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 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크기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